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국내 · 외 여성통신

- 해외
- 국내



독일, 코로나19 돌봄 공백에 따른 가족·친척 돌봄자 긴급지원 연장¹⁾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돌봄 시설 폐쇄 등으로 돌봄 공백이 늘어나자 독일 정부는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지원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작해 9월 말까지만 시행하기로 한 가족·친척 돌봄자를 위한 긴급지원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어간다.
- 구체적인 지원 내역을 보면, 우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긴급하게 가족이나 친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쓸 수 있는 '단기간 무급 돌봄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돌봄 시설 폐쇄 등으로 인해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돌봄 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다.
- 단기간 돌봄 휴가는 무급 휴가이기 때문에 휴가 기간에는 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돌봄지원금(Pflegeunterstützungsgeld)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근로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단기간 무급 돌봄 휴가를 쓰는 보험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세전 급여의 약 90%를 돌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가족이나 친지를 집에서 돌보거나 간병해야 하는 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됐다.
- 이 외에도 독일에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돌볼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휴가(Pflegezeit)' 제도가 있다.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가 있거나 가까운 가족·친척을 집 밖에서 보살피는 경우에도 이 휴가를 쓸 수 있다. '돌봄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는 직원이 15명 이상 일하고 있는 회사의 고용주에게 휴가를 요구할 수 있다.
- 돌봄휴가 이후에도 계속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쓸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Familienpflegezeit)' 제도도 있다. 독일 정부는 이 제도와 관련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휴가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 이전에 가족 돌봄 휴가를 쓰려면 근로자의 최소

* 해외 여성통신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1) 작성 : 채해원 독일통신원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이었지만 정부의 긴급 지원에 따라 주 15시간 이하 근무자도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가족 돌봄 휴가 역시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나 가까운 가족 친척을 집 밖에서 보살피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 돌봄 휴가는 직원이 25명 이상인 회사의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제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근로자가 생계를 위한 일을 함과 동시에 가족과 친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 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돌봄 시설 폐쇄 등으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담이 커졌다”며 “이들은 구체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에 정부는 가정 내에서 가족과 친척을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마지막 날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 현재 독일에서는 약 340만 명의 사람이 돌봄을 필요로 하며, 그중 3/4이 집에서 돌보고 있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자료에 따르면, 약 480만 명의 가족 및 친지가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돌봄과 간호를 제공하는 480만 명 중 약 250만 명은 근로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집에서 가족이나 친지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이들의 70% 이상이 여성이며, 이 여성들은 아이 육아와 돌봄에 대한 책임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 참고문헌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5.19), “Die Familienpflegezeit”, <https://www.bmfsfj.de/bmfsfj/themen/aeltere-menschen/vereinbarkeit-von-pflege-und-beruf/familienpflegezeit/die-familienpflegezeit/75714> (접속일: 2020.09.14.)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9.02.), “Akuthilfen für pflegend e Angehörige in der COVID-19-Pandemie werden verlängert”,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akuthilfen-fuer-pflegende-angehoerige-in-der-covid-19-pandemie-werden-verlaengert/160238> (최종 검색:2020.09.14.)

pflge.de(2020.08.27.), “Pflegeunterstützungsgeld: Lohnersatzleistung berechnen und beantragen”, <https://www.pflege.de/pflegekasse-pflegefinanzierung/pflegeleistungen/pflegeunterstuetzungsgeld/> (최종 검색:2020.09.15.)

독일, 조산자녀 대상 수당지급 기간 연장 등 일·가정 양립 위한 ‘부모휴직 수당’ 개선

- 독일 연방 정부가 ‘부모휴직 수당(Elterngeld)’을 개선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들이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제 근무를 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 출산 예정일보다 6주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복잡한 행정절차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독일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인기가 높은 가족 정책인 ‘부모휴직 수당’을 더욱 이용하기 쉬워졌다는 입장이다.
- 독일에서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이전보다 벌이가 감소한 부부나 파트너에게 최대 14

개월까지 현 월급의 약 65~67% 정도의 '부모휴직 수당'을 지급한다. 출산 전 수입이 없던 부모에게는 월 300유로(한화 약 41만 원)를 지급한다. 아버지 휴직률을 높이기 위해 부모휴직 수당을 신청하는 부부나 파트너 중 한 명이 12개월 이상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명이 2개월 이상을 반드시 휴직해야 한다.

- 시간제 일을 하는 부모와 파트너를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는 '부모수당 플러스(ElterngeldPlus)' 정책이 도입됐다. 이 수당은 시간제 일을 하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면서 주 25~30시간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부모수당 플러스'를 신청한 부모는 월별 수당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지급 기간을 약 28개월로 늘려 지원받는다. 또한 부부나 파트너 모두 시간제 일을 하면 '파트너십 보너스(Partnerschaftsbonus)' 정책에 따라 '부모수당 플러스'를 4개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프란치스카 기파이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에 약 2백만 명의 부모가 부모휴직 수당을 받았고 수당 제도가 도입되기 전 3%에 그쳤던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현재 40%까지 증가했다"며 "많은 부부 및 파트너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일·가정을 양립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첫째, 부모휴직 수당을 받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허용되는 부모의 근무 시간이 주 3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 32시간 이상 일하는 부모는 부모휴직 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둘째, 시간제로 일하는 부모 및 파트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함께 시간제 일을 하는 부부 및 파트너를 지원하는 '파트너십 보너스'의 허용 근무 시간 역시 이전 주 25~30시간에서 주 24~32시간으로 범위를 늘렸다. 현재 독일 부모의 1.9%(약 18,500명)가 '파트너십 보너스'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부모수당 플러스' 수당을 받는 아버지의 27.8%(약 8,000명)가 '파트너십 보너스' 수당을 받고 있다. 셋째, 자녀가 출산 예정일보다 6주 전에 태어난 경우에는 부모가 추가로 한 달 더 부모휴직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조산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 부모가 자녀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 이와 관련해 독일 정부는 시간제 근로를 하는 부모와 파트너 지원을 확대하고 조산아 부모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필요한 예산을 위해 부모휴직 수당 지원 자격을 수정했다. 이전에는 합계 연간 소득이 50만 유로(약 6억 8,354만 원) 이하인 부모에게 부모휴직 수당을 지급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지급 기준이 연간 30만 유로(약 4억 1,012만 원) 이하로 바뀌었다.
- 독일 정부는 이로 인해 부모휴직 수당을 받는 사람 중 0.4%(약 7,000명)에 해당하는 고소득 가구 부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들은 부모휴직 수당 없이도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한 자녀 양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부모의 경우, 수당 지급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연 소득 25만 유로(약 3억 4,177만 원) 이하다.
-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독일 부모의 68%는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길 원하며, 48%는 가족과 일의 균형을 맞추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모의 55%는 가족 정책이 부부 또는 파트너가 동등하게 일하고 함께 가족에 대한

책임을 맡을 수 있게 상황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82%는 '파트너십 보너스' 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부모나 파트너가 동등하게 자녀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참고문헌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9.17.), "Elterngeld und Elterngeld Plus", <https://www.bmfsfj.de/bmfsfj/themen/familie/familienleistungen/elterngeld/elterngeld-und-elterngeldplus/73752> (접속일: 2020.9.28.)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9.16.),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kabinett-beschliesst-verbesserungen-im-elterngeld/160580> (접속일: 2020.9.28.)

독일, 주 의회 남녀동등구성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비판 확산

- 2019년은 독일에서 의회를 남녀 동수로 구성하는 '남녀동등구성법(Paritätsgesetz)'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였다. 2019년 2월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의회가 의회를 남녀 동수로 구성하는 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브란덴부르크주와 튀링겐주 의회에서는 남녀동등구성법이 통과됐다. 남녀동등구성법이 시행되면 주 의회 선거에서 각 정당은 후보자 명단을 남녀 동수로 정해야 한다. 주 의회 정당별 선거위원회는 남성과 여성 별도의 선거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후 남녀 같은 수로 후보자 목록을 최종 작성하게 된다.
- 하지만 극우 정당인 국가민주당(NPD)과 독일을 위한 대안(AfD) 정당이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0월 브란덴부르크주 헌법재판소는 남녀동등구성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극우 정당은 이 법이 남성을 차별하며, 여성 의원 수가 적어 쿼터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후보자 명단에 남녀 동수를 요구하면 특정 후보가 배제될 수 있으며, 성별 비율이 불균형한 정당의 경우 남녀 동일 후보 목록을 작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만약 브란덴부르크주에서 남녀동등구성법이 최종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 났다면 오는 2024년에 주 의회의 모든 정당은 의원 후보자 명단에서 남녀 수를 동등하게 구성했을 것이다.
-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다. 브란덴부르크주 의회 의장인 울리케 리트케 사회민주당(SPD) 의원은 "여성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며, 이들이 의회 후보자 명단에 동등하게 오르는 것을 필수라고 보는 남녀동등구성법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주 의회 변호인도 브란덴부르크주는 헌법에 따라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 브란덴부르크주에 앞서 튀링겐(Thüringen)주의 의회에서도 남녀동등구성법을 통과시켰지만 1년만인 2020년 7월, 튀링겐주 헌법재판소 역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회민주당(SPD)과 좌파당(Linke), 녹색당(Grünen)이 함께 남녀동등구성법 시행을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유권자의 자유와 평등에 영향을 끼친다고 발표했다. 좌파당의 수잔나 헤니그-웰소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치와 의회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가 갖는 의미를 부정했으며, 남녀동등구성법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제한의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사회민주당 의원들도 다른 주에서 남녀동등구성법 시행을 이어가기 위해 어느 정도 헌법 수정이 가능한지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두 주정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정적으로 나긴 했지만, 독일에서 여성의원 비율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25년까지 기독교민주당(CDU)의 여성의원 비율을 50%까지 올리기 위해 여성 쿼터 비율을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기독교민주당은 메르켈 총리의 제안으로 당의 내부 규칙 초안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새로운 여성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오는 12월에 열리는 정당 전체 회의에서 당원들의 승인을 받으면 2021년부터 기독교민주당 소속 의회 의원과 정부 인사 비율의 최소 30%를 여성으로 채울 계획이다. 기독교민주당은 여성의원 비율을 2023년 40%, 2025년에는 50%로 점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DW)는 연방의회와 주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민주당이 지금까지 여성 할당제 시행을 꺼려왔지만, 이번에 추진 중인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키면 독일 정치 전반에 성평등과 관련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독일의 연방의회나 주정부 의회를 살펴보면 여성의원 비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2017년 연방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총 709석의 의석 수 중 남성 의원은 491석, 여성의원은 218석을 차지했다. 정당별 여성의원 비율을 살펴보면 녹색당과 좌파당이 58%과 54%로 가장 높고, 사회민주당이 42%로 뒤를 이었다. 기독교민주당은 약 24%에 머물고 있으며, 자유민주당(29%)과 독일을 위한 대안 정당(13%)의 여성의원 비율도 낮게 나타났다.
- 현재 독일 여성의 정치참여는 정당에서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여성 할당제에 의존하고 있다. 1986년 녹색당이 처음으로 여성 할당제 50%를 도입했으며 사회민주당은 1988년 40% 할당제를, 좌파당은 2011년부터 50% 할당제를 도입했다. 기독교민주당은 1996년부터 30% 여성 할당제를 도입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유민주당과 독일을 위한 대안 정당은 여전히 여성 할당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 참고문헌 •

DW(2020.10.23.), "Germany: Brandenburg court overturns gender quota for party candidate lists", <https://www.dw.com/en/germany-brandenburg-court-overturns-gender-quota-for-party-candidate-lists/a-55370228> (접속일: 2020.11.02.)

DW(2020.07.15.), "Germany: Thuringia state removes gender parity rule for election candidates", <https://www.dw.com/en/germany-thuringia-state-removes-gender-parity-rule-for-election-candidates/a-54191134> (접속일: 2020.11.02.)

DW(2020.07.08.), "Merkel's CDU aim to fill half of party posts with women by 2025", <https://www.dw.com/en/merkels-cdu-aim-to-fill-half-of-party-posts-with-women-by-2025/a-54087927> (접속일: 2020.11.04.)

독일, 심각한 여성살해(Femicide) 문제에 대한 지원대책 고심

- 독일 내에서 페미사이드(femicide, 여성살해) 문제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DW) 보도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서는 3일에 한번꼴로 여성이 현재

남성 파트너나 전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 지난해 독일에서 119명의 여성이 살해 당했고, 2018년에는 독일의 여성살해 건수가 유럽연합 국가 중 가장 많았다. 매해 현재 파트너이거나 전 파트너 남성에게 살인뿐만 아니라 신체 상해, 성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를 당하는 여성은 13만 명에 이른다.

- 헤센주 내무부의 범죄예방부서를 이끌고 있는 줄리아 셰퍼는 ‘도이치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프랑크푸르트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32세 의사였던 피해자는 전 파트너에게 칼로 18번 찔려 사망했는데, 그는 이 사건이 불행하게도 전형적인 여성살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전 파트너인 가해자를 떠났고 이후 가해자는 지속해서 피해자를 찾아와 위협하고 학대했다. 피해자는 경찰을 찾아가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살해했다. 줄리아 셰퍼 검사는 “남성 파트너에 의한 살해는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는 모욕과 수모, 경제적 압박으로 시작해 수년간 이어진 폭력의 결과다”라고 말했다.
- 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는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독일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형량이 문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프랑크푸르트 살해 사건과 유사한 많은 사건에서 독일 법원은 최대 10년형인 과실치사로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여성변호사협회(Deutscher Juristinnenbund)의 레오니 슈타인은 “대부분 피해자는 가해자가 결정한 삶에 따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당하고 있으며 이는 젠더에 기반한 불평등의 결과이다”라며 “이것이 바로 젠더로 인한 죽음인 페미사이드, 즉 여성살해의 정의”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변호사협회 회원들은 남성이 자신을 떠났거나 자신을 떠나가고 싶어해서 이전 또는 현재 파트너인 여성을 죽이는 경우는 ‘살인’으로 간주돼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독일 여성변호사협회 회원들은 독일에서 여성살해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많은 이들이 여전히 ‘페미사이드’란 용어를 들어본 적 없거나 여성이 납치, 강간, 살해되는 것이 멕시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에서 많은 이들이 여성 살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리로 나왔지만, 아직도 독일에서는 큰 문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여성살해 범죄에 대한 독일 언론 매체의 보도 행태를 비난했다. 이들에 따르면 독일 매체는 정기적으로 살인 사건을 선정적이고 낭만적으로 다루며 ‘열정의 범죄’, ‘사랑의 비극’ 또는 ‘가족 비극’이라는 잘못된 단어를 사용해 여성 살해 사건을 다룬다. 독일 비영리 여성단체 테르데팜프(Terre des Femmes)의 바네사 벨은 “매체에서 사용하는 이런 잘못된 문구는 대중이 여성살해 사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페미사이드가 독일 사회 문제가 아니라 사적인 문제로 잘못 인식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일에서 여성살해가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여성살해 사건 통계에는 가해자가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 받은 사례만 속하고, 실제 발생하는 살해 사건은 훨씬 많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유럽연합 연구에 따르면, 가정 폭력 사건의 1/3만이 경찰에 신고되었다.
- 이와 함께 활동가들은 ‘이스탄불 협약’ 발효와 관련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스탄불

협약은 여성폭력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포함한 유럽 내 첫 공통기준이다. 가입국은 협약에 따라 여성 폭력을 방지하고 근절하는 데 필요한 법안과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포괄적인 정책과 여러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서명 이후 협약 비준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 2018년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및 법적 보호 확대, 피해 여성 쉼터 마련, 국가 인식 캠페인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보고해야 한다.

- 한편 여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독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년간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 공간인 '여성의 집(Frauenhäuser)'과 전문 상담소의 지원을 확대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1억 2천만 유로(한화 약 1,555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독일에는 총 353개 '여성의 집'과 약 40개의 임시 주거시설이 있으며, 매년 약 3만여 명의 여성이 이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 참고문헌 •

DW(2020.11.10.), "Germany sees high numbers in femicide", <https://www.dw.com/en/germany-sees-high-numbers-in-femicide/a-55555702> (접속일: 2020.11.20.)
 Council of Europe(2020.8.31.), "Istanbul Convention Ac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https://www.coe.int/en/web/istanbul-convention/germany> (접속일: 2020.11.24.)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 <https://www.bmfsfj.de> (접속일: 2020.11.18.)

영국,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예산 삭감으로 여성에 대한 피임지원서비스 감소²⁾

- 영국 여성들 정부의 피임 관련 예산 삭감으로 피임 시술을 받거나 피임약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성과 생식 건강을 위한 초당 의회 모임(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 the UK: 이하 APPG SRH)는 2020년 9월 10일 발표한 '여성의 삶, 여성의 권리(Women's Lives, Women's Rights: Strengthening Access to Contraception Beyond the Pandemic)'라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민건강서비스(NHS) 산하 일반 병원들(GP)과 시설 병원들이 피임 지원 서비스를 줄이면서 여성들이 제때 피임을 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APPG SRH는 의회 의원들이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특정한 사안을 중심으로 뭉쳐서 활동하는 비공식 모임으로 법안을 내놓는 위원회와는 차이가 있다. APPG SRH는 낙태가 필요한 여성들의 건강과 관련된 사안을 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과 협업해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활동 목적이다. APPG SRH는 여성건강부 장관(Minister for Women's Health),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등 공공기관과 관련 민간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구술 증언을 바탕으로 해당 보고서를 작성했다.

2) 작성 :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일상적으로 가능했던 장기 피임 (Long-acting reversible contraceptive: LARC) 시술이 중단됐다. 장기 피임이란 한 시적 피임이 아니라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까지 장기간 지속되는 피임 방법으로 자궁 내 삽입하는 피임 기구와 호르몬 피임 요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피임 시술이 가능한 전체 병원 중 54%가 긴급 피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했고, 전체 중 39%가 피임 시술 합병증 치료 서비스를 중단 또는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에서 피임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은 크게 세 곳으로 국민건강서비스(NHS),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 NHS 산하 GP 연합체인 Clinical Commissioning Groups(CCGs)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코로나19 이후 피임 서비스를 아예 중단하거나, 피임 업무를 담당했던 필수 의료 인력을 다른 업무에 배치하면서 여성들이 원치 않을 임신할 위험에 놓이게 됐다.
- 보고서는 영국의 피임 지원 시스템에 차질이 생긴 것은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2017~2018년도 성과 생식 건강을 위한 예산(SRH budgets)은 2015 년도와 비교해 8,120만 파운드 (한화 약 1,213억 원) 깎여 12% 줄었고, 같은 기간 순수 피임 예산도 2,590만 파운드 (약 390억 원) 줄어 감소폭이 13%나 됐다.
- 특히, 이 기간 장기 피임 시술 관련 예산이 눈에 띄게 줄었다. 보고서는 “영국 국민건강 서비스(NHS) 산하 일반병원들에서 환자에게 장기 피임 시술을 하면 정부가 진료 및 시술비를 일반병원에 되돌려 준다. 그런데 GP의 예상 청구액보다 정부가 적은 금액을 환급하다 보니 일반병원에서는 금전적으로 손해가 나는 장기 피임 시술 횟수를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 예산 삭감은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쳤다.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GP에서 의료 진들에게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생겼고, 피임 전문의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됐다는 것이다.
- APPG SRH 의장인 대임 다이애나 존슨 의원은 “이 보고서는 여성들이 원할 때 피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이런 현실은 여성들이 스스로 임신과 임신 중단, 출산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참고문헌 •

APPG SRH (2020.9.20.), “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https://www.fsrh.org/policy-and-media/all-party-parliamentary-group-on-sexual-and-reproductive-health/> (접속일: 2020.9.20.)

APPG SRH (2020.9.10.), “Women’s Lives, Women’s Rights”, <https://www.fsrh.org/documents/womens-lives-womens-rights-executive-summary/> (접속일: 2020.9.20.)

영국, 법률위원회, 여성혐오를 혐오범죄로 포함하도록 법 개정 추진 제안

-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여성혐오(misogyny)가 혐오범죄(hate crime)에 포함될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의회에서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위원회는 9월 23일 발표한 혐오범죄 자문 보고서(Consultation Paper)를 통해 “현행 혐오범죄 법에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특성으로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장애, 성전환자 신분이 포함돼 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sex)과 젠더(gender)도 혐오범죄 관련 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특성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률위원회는 정부 및 의회에서 발의한 법안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독립 기관이다.

- 혐오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1998 범죄장애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28~32항과 2003 형사법(the Criminal Justice Act 2003) 145항, 146항에 각각 명시돼 있는데, 영국 경찰과 검찰은 누군가가 장애, 성전환자 신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때문에 범죄 피해를 봤을 경우에만 혐오범죄로 정의한다. 현행법에 따라 여성혐오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 하지만, 혐오범죄에 여성혐오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영국 사회 곳곳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성 권리 옹호 단체인 Citizens UK와 Women’s Aid, the Fawcett Society를 비롯해 영국 의회 의원 조 스윈슨 등과 전 내무장관인 자키 스미스, 영국 노팅엄셔 주(County)의 자치경찰위원장인 패디 티핑이 디 런던경찰청장과 새라 손튼 영국 경찰서장 협의회(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 NPCC) 의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여성혐오를 혐오범죄로 분류해 처벌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 법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이런 영국 시민 사회의 요구를 언급하며 “현행법에 성과 젠더를 보호받아야 할 특성으로 추가하면 여성혐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현재 경찰에 접수되는 혐오범죄는 대부분 인종 차별과 관련된 사건이다. 영국 내무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영국 웨일스와 잉글랜드에서 경찰에 접수된 혐오범죄 관련 사건은 총 10만 3천 379건으로 전체 접수 사건의 76%가 인종 차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혐오범죄 접수 사건 중 12.5%인 1만 2천 828건이 기소됐으며, 전체 접수 사건 중 1만 817건(10%)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법률위원회는 현행 혐오범죄 관련 법이 현재 영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혐오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여성혐오와 연령차별주의(ageism), 노숙인과 성 노동자(sex workers)와 같은 특정 계층을 향한 혐오가 빈번하게 표출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여전히 ‘장애, 성전환자 신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때문에 범죄 피해를 봤을 경우만 혐오범죄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 법률위원회 위원인 페니 루이스 킹스칼리지런던대 법대 교수는 “혐오범죄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라면서 “법률위원회의 자문 보고서는 처음으로 여성혐오를 혐오범죄에 포함해 법을 통해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라고 보고서에 의미를 부여했다.

• 참고문헌 •

Law Commission (2020.9.23.), “Reforms to hate crime laws to make them fairer, and protect women for the first time”, <https://www.lawcom.gov.uk/reforms-to-hate-crime-laws-to-make-them-fairer-and-to-protect-women-for-the-first-time/> (접속일: 2020.10.15.)

Law Commission (2020.9.23.), "Hate Crime: Consultation Paper Summary", <https://s3-eu-west-2.amazonaws.com/lawcom-prod-storage-11jsxou24uy7q/uploads/2020/09/Hate-crime-final-summary.pdf> (접속일: 2020.10.15.)

The Guardian (2020.9.23.), "Misogyny 'should become a hate crime in England and Wales'", https://www.theguardian.com/law/2020/sep/23/misogyny-hate-crime-england-wales-law-commission?CMP=fb_gu&utm_medium=Social&utm_source=Facebook&fbclid=IwAR1OjUoQ1TOz-OyLbuv_BqwpP-E-hvpg7Ae8phxAtwhz07fhpY8HBjBEi0#Echobox=1600851898 (접속일: 2020.10.15.)

영국, 킹스칼리지런던대 연구팀, 남성보다 여성이 만성 코로나19(코로나후유증) 가능성 크다고 발표

- 영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 중 50~60대 여성이 만성 코로나19(Long-COVID) 증상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킹스칼리지런던대(King's College Lonon) 소속 클레어 스티브 박사와 팀 스펙터 교수가 주도한 이 연구는 코로나19 증상 연구 애플리케이션(COVID Symptom Study app) 사용자 4,182명을 대상으로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코로나19 연구를 위해 2020년 3월 비영리 목적으로 출시된 이 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연구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만성 코로나19란 피로감, 두통, 호흡 곤란, 후각 상실 증상 등이 짧게는 4주, 길게는 12주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이 한 달 넘게 지속하는 만성 코로나19 증상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나이가 60세가 넘으면 코로나19 위험도가 성별과 상관없이 비슷해졌다. 특히, 50~60대 여성의 경우 성별과 고령에 따른 위험 요인을 모두 갖추고 있어 만성 코로나19 위험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높았다. 50~60대 여성은 18~30세 전체 남녀와 비교했을 때 만성 코로나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50대 여성은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만성 코로나19 위험도가 2배 높았다. 스펙터 교수는 "이는 자가면역 질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패턴"이라면서 "류머티즘 관절염, 갑상선 질환, 루푸스 병(lupus)은 폐경을 겪기 전 남성보다 여성이 걸릴 가능성이 2~3배가량 높으며 이후에 위험도가 비슷해진다"고 분석했다. 즉, 다른 자가면역 질환처럼 특정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는 성별에 따라서 면역 체계가 코로나19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티브 박사와 스펙터 교수의 이번 연구 결과는 건본인쇄(preprint)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입수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연구는 이후 학술지 게재의 핵심 과정인 동료 평가(peer review)를 거쳐야 한다.
- 이에 앞서, 기저 질환이 없는 건강한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임신하지 않은 여성들과 비슷한 정도의 병세를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임신 자체가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본 기존의 연구와 대조되는 결과다. 킹스칼리지런던대 의료 연구위원회(Medical Research Council) 소속 에리카 모태니 박사 등은 2020년 9월 '임산부의 코로나19 감염: 증상 특징과 실시간 참여를 통한 질병의 심각성'이라는 제목

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들은 임산부를 두 개 그룹으로 나눴다. 첫 번째 그룹에는 코로나19 증상 연구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중 임산부 1만4천 명이 포함됐으며, 이 중 코로나19 유증상자는 629명(4.49%), 병원 입원 환자는 21명(0.15%)였다. 첫 번째 그룹에서 얻은 결과는 코로나19 증상 연구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중 임신하지 않은 여성 38만7천 명의 응답을 분석해 비교했는데, 이 중 코로나19 유증상자는 2만 5천 명(6.4%), 병원 입원자는 600명(0.15%)로 나타났다. 두 번째 그룹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 참여자 130만 명으로, 이중에서 4만 2천 명이 임산부였다. 임산부 4만 2천 명 중 코로나19 유증상자는 2.9%, 임신하지 않은 여성 전체 여성 응답자 중 유증상자 4%로 두 그룹의 감염자 비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보고서에서 연구진들은 “기저 질환이 없는 임산부들이 임신하지 않은 여성들보다 COVID-19 때문에 심각한 증상을 겪거나 회복이 더 느리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요약했다.

- 한편, 영국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남녀, 나이에 상관없이 장기적 만성 질병을 겪는 환자, 임산부 등 코로나19 및 독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독감 우선 접종을 하고 있다. 해당 고위험군에만 독감 접종이 완료되면, 그다음 위험군인 50~64세를 대상으로 독감 접종을 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 •

The Guardian(2020.10.21.), "Women aged 50-60 at greatest risk of Long Covid, experts suggest",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oct/21/women-aged-50-60-at-greatest-risk-of-long-covid-experts-suggest> (접속일: 2020.10.25.)

Medrxiv.org(2020.10.19.), "Attributes and predictors of Long-COVID: analysis of COVID cases and their symptoms collected by COVID Symptoms Study App", <https://www.medrxiv.org/content/10.1101/2020.10.19.20214494v1.full.pdf> (접속일: 2020.10.25.)

GOV.UK(2020.9.22.), "Record numbers offered flu vaccine as those with flu and COVID-19 more likely to die", <https://www.gov.uk/government/news/record-numbers-offered-flu-vaccine-as-those-with-flu-and-covid-19-more-likely-to-die> (접속일: 2020.10.25.)

COVID Symptom Study (2020.9.1.), "Healthy pregnant women do not fall more seriously ill from COVID-19", <https://covid.joinzoe.com/post/healthy-pregnancy-covid> (접속일: 2020.10.25.)

영국, 여성 전용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위해 정책 재검토

- 영국 정부가 여성 전용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등을 포함해 공중화장실 정책을 재검토한다. 최근 몇 년간 영국에서 성 소수자를 비롯해 남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성 중립 화장실(gender neutral toilet) 설치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여성 전용 화장실 숫자가 줄어 여성의 화장실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다.
- 담당 부처인 주택공동체지방정부(Ministry of Housing, Community & Local Government)는 10월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공중화장실을 성 중립 화장실로 개조하면서 여성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생리 종이거나 임신, 폐경을 겪는 여성들은 여러 이유로 여성 전용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을 수 있으나 성 중립 화장실은 이러한 여성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화장실 정책을 재검토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정책 검토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화장실을 이용할 때 항상

칸막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남성 화장실 대비 여성 화장실 비율이 적절한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정책 재검토는 화장실 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내년 1월까지 수렴한 뒤 이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식으로 진행된다.

- 영국에서 성 중립 화장실 설치가 논란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남성용 소변기가 있는 성 중립 화장실 숫자가 증가하면서 역으로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남녀 화장실 분쟁의 대표적인 예가 2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런던의 올드 빅 극장(Old Vic Theatre)의 화장실 개조 사건이다. 지난해 올드빅 극장은 시민 모금으로 마련한 10만 파운드(우리 돈 약 1억 5천만 원)를 투입해 기존 남녀 화장실을 모두 성 중립 화장실로 개조했다. 원래 의도는 성 소수자들을 포함해 남녀 모두 편하게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자는 것이었지만, 의도와는 다른 일이 벌어졌다. 전체 화장실에 칸막이와 소변기를 동시에 설치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여성들은 남성용 소변기를 제외한 칸막이 화장실 24곳을 이용할 수 있지만, 남성들은 칸막이를 포함해 화장실 42곳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화장실에 갈 때마다 여성이 더 오래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올드 빅 극장은 남성과 같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한 여성이 여성 전용 화장실 사용할 선택권을 없앴다는 비판까지 감수해야 했다.
- 페미니스트들은 공중화장실 설계가 여성의 화장실 이용 습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영국 여성 인권활동가이자 작가인 캐롤라인 크리아도 페레스는 ‘Invisible Women: Exposing Data Bias in a World Designed for Men’이라는 책에서 남녀 화장실 숫자를 똑같이 한다고 해도 여성 화장실 앞에 길게 늘어서는 줄을 없애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페레스는 책에서 여성의 화장실 이용 시간이 남성보다 평균 2.3배가량 높아서 공공시설에 여성 화장실 숫자가 남성 화장실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 인구의 노인과 장애인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다는 점, 돌봄 노동을 도맡아 하는 여성이 아이나 노인, 장애인 등 노약자를 데리고 화장실에 갈 가능성이 남성보다 크다는 점, 가임기 여성이 월경을 겪으면 생리용품을 교체하는데 시간이 길어져 소변을 보더라도 남성보다 화장실 사용 시간이 길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 로버트 젠릭 주택공동체지방정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많은 여성들과 노인들이 공중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여성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문헌 •

GOV.UK(2020.10.31.), “Government review to boost the provision of toilets for women and men”,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review-to-boost-the-provision-of-toilets-for-women-and-men> (접속일: 2020.11.10.)

GOV.UK(2020.10.31.), “Toilet provision for men and women: call for evidence”,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toilet-provision-for-men-and-women-call-for-evidence> (접속일: 2020.11.10.)

Independent(2019. 10.2.), “Old Vic theatre replaces single-sex toilets with inclusive facilities for all genders”, <https://www.independent.co.uk/life-style/old-vic-gender-neutral-toilets-pictures-single-sex-male-female-a9129016.html> (접속일: 2020.11.10.)

The Guardian(2019.11.14.), “The queue for women’s toilets is a feminist issue”,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9/nov/14/queue-ladies-loo-feminist-issue-public-toilets> (접속일: 2020.11.10.)

캐나다 여성계, 코로나19의 성별화된 피해 회복을 위해 긴급지원금 대신 기본소득제로의 전환 요구³⁾

- 캐나다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이후, 캐나다 긴급지원(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정책을 실행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상태에 처하게 된 850만 명의 캐나다인들에게 매달 2000 캐나다 달러(약 176만원)를 지급해 오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통제되는 듯 보였던 캐나다의 코로나19 상황은 2020년 9월 개학을 기점으로 또다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이 긴급 재정지원 프로그램은 10월을 마지막으로 종료를 앞두고 있어 긴급 재정지원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 최근 캐나다에서 4천여 명의 개인들과 단체들로 구성된 온타리오 기본소득 네트워크(Ontario Basic Income Network)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의 젠더적 측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긴급 재정지원에서 기본소득(guaranteed basic income)으로 정책을 전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 여성재단과 여러 여성단체들이 참여한 이 네트워크는 코로나 경제위기는 캐나다 사회의 구조적인 젠더 불평등이 심화된 형태로 드러난 것이고 이 때문에 실업 등 경제적 충격이 여성들에게 유독 가혹했다고 지적하면서, 실업급여 등의 기존 부조 정책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다루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직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란 개인의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이 기본적인 삶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에 정부로부터의 조건 없는, 자동적인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9월 초 연방 정부 노동부 장관이 연방 정부가 기본소득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고, 이어 현 여당인 자유당 의원들이 기본소득 제도가 11월 전당대회에서 최우선으로 논의 될 것이라고 밝혀 현재 긴급 재정지원 이후의 정책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뉘고 있다. 예컨대 9월 19일 글로벌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콩코디아 대학(Concordia University) 경제학과 모세 렌더(Moshe Lander) 교수는 기본소득제도는 그 의도는 좋으나 효과적으로 올바르게 집행하기가 어려운 제도이며 현재 캐나다 정부 부채가 연 3천 5백억 달러로, 시행 가능할지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소규모의 노동인구로 하여금 대량의 실업자들을 지탱하도록 하는 제도는 장기적으로 작동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 페미니스트들은 기본소득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예컨대 9월 15일 토론토스타지의 보도로는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캐나다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가정폭력은 늘어나 지역에 따라 30% 늘어나기도 했는데,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웨스턴 대학원(King's University College at Western University) 트레이시 스미스-캐리어(Tracy Smith-Carrier) 교수는 많은 여성이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그럴만한 경제적 여건이 없어서라고 설명했다.

3) 작성: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실업 여부만으로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판단하고 지원한다면 이러한 여성들이 처한 젠더화된 위기는 사각지대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캐나다 여성재단 또한 빈곤의 젠더적 측면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이 공식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여부에 의존하는 긴급재정지원보다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기본소득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먼저 여성들이 집안에서 수행하는 무급 노동을 정부가 기본소득으로서 보조할 수 있다면 여성의 경제활동을 참여가 높아지고 전반적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여성재단에 의하면 이러한 선순환 효과는 퀘벡주의 사례로 입증되었는데, 2008년 퀘벡주가 저비용의 아이 돌봄 시스템을 갖춘 후 주의 GDP가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또한 주 정부가 여성의 돌봄노동을 분담함에 따라 한부모 가정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여성들의 수가 5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이다. 캐나다 여성재단은 기본소득이 운용하기에 너무 비싸다거나 혹은 이 제도가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2017년과 2018년 핀란드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파일럿 프로그램에서도 기본소득을 받은 개인들이 실업수당을 받은 개인들보다 더 일을 했다는 점, 최근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기본소득이 긴급재정지원을 운용하는 것 보다 비용이 절감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으로 반론했다. 여성재단은 또한 현재 캐나다에 20만 명의 빈곤 여성들이 존재하는데, 재단의 빈곤여성 연구에 의하면 빈곤인구의 절반가량이 자신들이 교육을 받을 시간과 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원하는 정도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본소득제도로 이들 여성들 모두를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면 이들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노동시장 참여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젠더화된 빈곤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The Star(2020.09.15.), "Coalition calls on federal Liberals to bring in a basic income to address gender inequality", <https://www.thestar.com/news/canada/2020/09/15/coalition-calls-on-federal-liberals-to-bring-in-a-basic-income-to-address-gender-inequity.html> (접속일: 2020.09.20.)
- Global News(2020.09.19.), "Basic income rally held at Alberta legislature grounds amid looming CERB deadline", <https://globalnews.ca/news/7346641/coronavirus-alberta-legislature-rally-kerb-deadline/> (접속일: 2020.09.20.)
- Global News(2020.09.12.), "Guaranteed basic income emerges as top policy priority for Liberal MPs amid COVID-19", <https://globalnews.ca/news/7330929/liberal-caucus-guaranteed-income/> (접속일: 2020.09.20.)
- Canadian Women's Foundation(2020.08.31) Is Gender-Relevant Universal Basic Income Possible? <https://canadianwomen.org/blog/basic-income-covid/> (접속일: 2020.09.20.)

캐나다 등 22개국 여성의 58%가 온라인 성희롱 경험, 소셜미디어의 젠더폭력 예방조치 강화 필요

- 2020년 10월 첫째주, 비정부 국제 구호기구 플랜 인터내셔널(Plan International)은 캐나다를 포함한 22개국 15세 이상 25세 이하 14,00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성희롱(online gender-based harassment)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에는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스페인, 인도 등 22개국의 여성들이 참여하였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참여했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 데이터는 2020년 4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수집되었다.

- 이 보고서는 온라인 성희롱을 “타인의 성, 성 정체성에 기반하여 그 타인에게 해로운 젠더규범을 강제함으로써 해를 끼치는 행위로 스토킹, 괴롭힘(bullying), 성희롱(sex-based harassment), 모욕(defamation), 혐오 발언, 착취, 그리고 젠더 트롤링(gendertrolling: 온라인 상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낙인찍는 은어들을 생산 및 재생산 하는 행위)을 포함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보고서는 응답자들이 속한 국가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여성들이 온라인상의 희롱을 광범위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22개국 전체 응답자의 58%가 소셜미디어에서 희롱 또는 괴롭힘(harassed or abused)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50%는 길거리에서의 희롱보다 온라인에서의 희롱이 더 심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온라인 성희롱이 빈번한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39%), 인스타그램(23%), 왓츠앱(14%), 스냅챗(10%), 트위터(9%), 틱톡(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44%가 소셜미디어가 이용자들을 온라인 젠더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해 현재 소셜미디어가 여성 이용자들을 온라인상의 젠더폭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함을 드러냈다.
- 한편, 캐나다에서는 1,002명이 이 조사에 참여하였는데, 이들 캐나다 응답자의 62%가 ‘온라인 성희롱/괴롭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온라인 젠더폭력 경험자의 25%는 ‘자주’, 35%는 ‘매우 자주 온라인 성희롱을 당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캐나다 응답자들이 경험하는 온라인 성희롱의 주된 양상으로는 모욕적인 언어가 72%로 가장 높았고, 고의적인 망신 주기가 64%, 외모 놀림이 61%, 성희롱이 55%, 스토킹이 51%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응답자들의 72%는 소셜미디어에서의 괴롭힘 등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빈번한 형태의 부정적 경험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응답자들의 48%는 온라인 희롱 및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한 괴롭힘을 무시하겠다고 했으며 37%는 자신을 괴롭히는 상대를 신고 하던가 프라이버시 세팅을 강화하여 차단하겠다고 응답했으나, 19%는 아예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게재하는 행위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응답하였고, 8%는 소셜미디어 자체를 끊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조사 참여자들의 이러한 응답에 대해 플랜 캐나다는 현재 소셜미디어 자체적으로 기술적인 해결방안을 어느 정도 제공하고는 있으나 만연한 온라인 폭력을 방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소셜미디어상의 신고 제도를 손쉽게 개선해야 하고 가해자를 빠르게 식별해 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 측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플랜 캐나다는 소셜미디어들이 해결방안 모색에 있어 여성들의 경험을 반영해야 함이 중요하므로 여성들과 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참고문헌 •

CISION(2020.10.05.), “Online Harassment is Silencing Girls Online, Driving Them from Facebook, Instagram and Twitter”, <https://www.newswire.ca/news-releases/online-harassment-is-silencing-girls-online>

ne-driving-them-from-facebook-instagram-and-twitter-802561885.html (접속일: 2020.10.10.)
 The Guardian(2020.10.04.), "Online Violence Against Women 'Flourishing', and Most Common on Facebook, Survey Finds",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oct/05/online-violence-against-women-flourishing-and-most-common-on-facebook-survey-finds> (접속일: 2020.10.10.)
 Plan International(2020), "Free to be Online? Girls' and Young Women's Experiences of Online Harassment", https://plancanada.ca/file/planv4_files/biaag/SOTWGR2020-CommsReport-EN.pdf (접속일: 2020.10.10.)

캐나다,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젠더폭력 대응강화

- 캐나다 정부는 2020년 3월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미국과의 국경을 역사상 최초로 봉쇄하고 전면적인 락다운을 시행하는 등의 강도 높은 대응을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상반기 동안 진정되는 듯 보였는데, 2020년 8월까지 일일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천 명 이하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 완화 이후 특히 9월 개학과 함께 확진자가 폭증하여 캐나다는 2차 유행에 들어서게 되었다. 9월 들어서는 캐나다의 일일 확진자가 천 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3월에 발표된 긴급 지원책들은 대부분이 8, 9월에 만료되어 9월 23일 캐나다 연방정부 의회 개원 연설에서 이미 기정사실화된 캐나다 내 코로나19 2차 유행에 캐나다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 이날 개원 연설에서 여성 관련 정책은 크게 여성의 경제적 안녕과 젠더폭력 대응 두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되었다. 현재 캐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80년대 이후 최하위로 치닫고 있고, 특히 저소득, 이민자와 유색인종 여성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여성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다. 예컨대, 캐나다 여성재단에 의하면 2020년 6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발생한 77%의 경제활동 시간 손실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적 위기를 언급하며 캐나다 정부는 조만간 페미니스트적, 교차적(intersectional) 관점을 반영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액션플랜(Action Plan for Women in the Economy)을 구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 발표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은 젠더화된 돌봄의 의무와 분리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접근성 높은 퀘백주 모델을 참고한 아이돌봄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여성 기업가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돌봄 직종 등 여성 집중 저임금 직종 등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 젠더폭력 관련해서 캐나다 정부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젠더폭력 액션플랜을 코로나19 시국에 맞게 적용하려면 피해자들이 어디에 살든지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9월 23일 개원 연설에서는 코로나 시국에서 젠더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쉼터와 임시거처(transition housing)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연방정부는 며칠 후인 10월 2일 5천만 달러(약 432억원)를 젠더폭력 쉼터 등을 운영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데 투자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천만 달러(약 86.5억원)를

쉼터와 성폭력 센터에 지원하여 단체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또 다른 천만 달러를 원주민 거주 지역에서 젠더폭력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체들에게, 3천만 달러를 기타 여성단체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늘어나는 서비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 캐나다 정부는 2020년 3월 약 820억 달러 규모의 비상 재정 지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폭력 센터와 여타 젠더폭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미 5천만 달러를 편성한 바 있다. 이번에 또다시 5천만 달러를 편성하면서 캐나다 정부는 총 1억 달러를 젠더폭력 관련 재정 지원에 투여하게 되었다. 10월 2일 이러한 재정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캐나다 여성부 장관은 캐나다 정부가 이미 코로나 사태 초기에 젠더폭력을 주요한 위협 요소로 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올해 3월과 4월에 캐나다 통계청이 수집한 데이터에 의하면 열 명 중 한 명의 캐나다인들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앞으로 높아질 가정폭력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혹은 극심히 우려를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 캐나다 언론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2020년 3월 재정 지원으로 온타리오의 291개 단체들이 문을 닫지 않고 코로나 사태 내내 센터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들 지원을 받은 단체들은 위생 절차를 강화하고 늘어난 수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직원들을 고용하거나 서비스를 원거리로 제공하기 위한 기기 등을 구매하는데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예컨대 글로브 앤 메일(Globe and Mail)지에 따르면 온타리오에서 가정폭력 피해 아동과 여성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Women's Habitat은 코로나 사태 이후 슈퍼마켓 화장실에서 걸려오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고 있는데, 기부와 자선행사 등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던 이 단체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직후에 64,000달러의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 계속 활동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단체 Alternatives for Women 또한 32,000달러를 지원 받았는데, 이 단체는 보통 가해자가 출근한 사이 센터에서 피해자들과 상담을 진행해왔었는데 락다운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출장 상담이나 야외 상담소 설치 등에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센터 활동을 지속하였다고 한다.

• 참고문헌 •

Women and Gender Equality Canada(2020.10.02.), "Government of Canada accelerates investments in shelters, transition housing and other organizations providing gender-based violence supports and services", <https://www.canada.ca/en/status-women/news/2020/10/government-of-canada-accelerates-investments-in-shelters-transition-housing-and-other-organizations-providing-gender-based-violence-supports-and-se1.html> (접속일: 2020.10.19.)

The Globe and Mail(2020.10.08.), "Federal government doubles emergency funding to help victims of gender-based violence", <https://www.theglobeandmail.com/politics/article-federal-government-doubles-emergency-funding-to-help-victims-of-gender/> (접속일: 2020.10.19.)

Canadian Women's Foundation(2020.09.24.), "Statement on the Speech from the Throne", <https://canadianwomen.org/blog/throne-speech-2020/> (접속일: 2020.10.19.)

캐나다, 연방경찰 내 심각한 직장 성희롱 · 성차별 피해에 대해 적극 개선노력 밝혀

- 2020년 11월 11일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대(RCMP: Royal Canada Mountain

Police, 이하 연방경찰) 내의 여성혐오, 성차별적인 문화가 피해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한 조사 보고서 “깨진 꿈, 깨진 삶(Broken Dreams, Broken Lives)”이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2016년에 연방 경찰에 근무하며 성차별, 성폭력 등의 피해를 겪은 수천 명의 여성에게 국가가 금전적 보상을 명한 ‘멜로-데이비슨 결정(Merlo-Davison settlement)’ 이후 4년 만에 당시 사건의 원인과 피해를 심층적으로 보고한 자료이다.

- 이 조사는 연방경찰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 미셸 바스타하시(Michel Bastarache)에게 독립적인 사건 조사를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2016년 멜로-데이비슨 결정 후 저자가 3년 이상 전국을 돌며 피해자들을 만나 조사를 진행했다. 멜로-데이비슨은 당시 집단소송을 주도한 전직 연방경찰 피해 여성들의 이름이며, 당시 접수된 피해 내용 들에는 상사와 성적 관계를 거부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불만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업무 제외, 특정 임무-예컨대 잠복이나 특수 수사팀 등-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외 혹은 희롱, 직장 내 강간, 경멸적인 언어, 성적인 농담, 성 소수자들에 대한 아우팅(being outed) 등이 있었다. 당시 캐나다 정부는 연방경찰에서 근무 중 성희롱, 성 지향성 때문에 차별을 당한 여성들에 대한 피해 보상 평가에 있어서 피해의 정도를 여섯 단계로 나누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였는데, 1차 평가에서 피해 정도가 레벨3 이상인 여성들은 평가 의원과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총 접수된 3,086 피해 사례 중에서 2,304의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았고 644건의 인터뷰가 시행되었다. 이 사건으로 연방정부는 1억 2,540만 캐나다 달러(약 1,068억 원)의 피해 보상액을 포함한 1억 3,740만 캐나다 달러(약 1,170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 이 보고서에서 저자는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성희롱, 차별 등의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당시 집단소송에 참여했던 피해 여성 다수가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약물 남용, 불안증 등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고, 이들 중 한 명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했다. 저자는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의 경찰 자체 조사와 보고서, 법정 공방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직의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적인 문화(toxic culture)가 조직 내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연방경찰 내에는 여성 혐오(misogynistic),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의 문화가 여전히 건재하며 경찰 구성원들은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러한 문화에 순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 구성원들은 소수 타인을 탓할 뿐 그러한 독소적인 문화에 순응하는 자신들 또한 그 문화를 정당화하고 제도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저자는 현재의 경찰 조직 구조가 과연 이러한 독소적 문화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매우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소송이나 이를 통한 보상은 문제의 표면만을 다룰 뿐 이 독소적인 문화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바, 중앙으로부터의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자는 여성들을 경찰에서 성공 방해하는 요소들을 특정하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외부로부터의 독립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제언하면서 교육, 채용, 채용 공고, 인사 등 전반에 걸친 52개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 19일 캐나다의 트뤼도 수상은 이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8년 정부가 캐나다 역사 최초의 여성 연방

경찰청장(Commissioner Brenda Lucki)을 임명할 때 정부가 그녀에게 부여한 주요한 임무는 경찰 내부의 이러한 문화를 바꾸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트뤼도 수상은 또한 경찰이 그 조직의 구성원들을 희롱과 차별로부터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캐나다 시민들이 경찰의 법 집행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RCMP를 개혁하기 위한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캐나다 공중안전부 장관 (Public Safety Minister Bill Blair) 또한 성명을 통해 일터에서 누구나 차별이나 희롱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차별이나 희롱을 당하는 것이 많은 여성과 성 소수자들이 경찰 내에서의 일상이라면서 경찰 내에서의 가학적인 행위가 조직화 되어 있는 것 (systemic patterns of abusive behaviour)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연방경찰 또한 19일 이 보고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연방경찰의 공식 성명은 직장 내 차별과 폭력에 맞서 나선 여성들의 용기를 언급하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경찰이 현재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희롱 사건 접수 및 처리를 일원화하고 효율화하였으며 현재 육아 휴가의 사용 및 원활한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질 전문적인 팀을 런칭할 계획이며, 경찰 모집 과정을 현대화하여 경찰 내에 다양성을 높일 계획 등을 구체화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방경찰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 또한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독소적 문화를 경험한 바 있다고 하면서 경찰이 여성 구성원들을 실망하게 한 것에 분노를 표하면서도 거듭 사과했다.

• 참고문헌 •

CTV News(2020.11.19.), "RCMP vows reform after report details 'toxic' and hateful culture within the force", <https://www.ctvnews.ca/politics/rcmp-vows-reform-after-report-details-toxic-and-hateful-culture-within-the-force-1.5195954> (접속일: 2020.11.20.)

Merlo Davidson Settlement Agreement(2020.11.11.), "Broken Dreams Broken Lives: The Devastating Effects of Sexual Harassment on Women in the RCMP", https://merlodavidson.ca/wp-content/uploads/RCMP_Final-Report_Broken-Dreams.pdf (접속일: 2020.11.20.)

RCMP(2020.11.19.), "RCMP response to the report of the Independent Assessors regarding the claims made under the Merlo/Davidson settlement agreement", <https://www.rcmp-grc.gc.ca/en/rcmp-response-the-report-the-independent-assessors-the-claims-made-the-merlodavidson-settlement?fe%20> (접속일: 2020.11.20.)

유럽, 코로나19 위기 속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요구 확대⁴⁾

- 한국에서 낙태죄 정부입법예고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코로나 위기 속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럽 국경은 물론 수많은 임신중지 관련 기관 및 병원이 폐쇄된 상태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모든 상황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4) 작성: 채해원 독일 통신원

-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DW)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로 인해 많은 임신중지 클리닉이 운영을 축소하거나 문을 닫아 여성들이 안전한 임신중지 과정에 접근하기 어려워졌다. 이는 ‘위민온웹(Women on Web)’의 자료에 따른 것인데, 캐나다에서 2006년에 설립된 ‘위민온웹’은 임신중지하려는 여성에게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약 접근이 어려운 여성에게 약을 우편으로 보내는 일을 한다. 낙태를 금지하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허용하는 국가에 거주하는 이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단체이다. ‘위민온웹’에서 제공하는 임신중지 약에는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2018년 지침에 따르면, 이 두 약은 혼용으로 자가 투약하기에 안전하다.
- ‘위민온웹’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하잘 아타이는 “현재 많은 국가의 의료진과 병원이 코로나 감염 환자 치료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임신중지와 관련한 지원을 간절히 원하는 여성을 더 어렵게 만들거나 웹사이트 검열이라는 권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위민온웹’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한국 등이다. 스페인 역시 웹 사이트 접근을 금지했는데 이에 대해 스페인 내무부 관계자는 도이치벨레와의 인터뷰에서 “스페인에서 온라인으로 처방약을 구매하는 것이 불법이라 이런 조치가 취해졌으며 스페인의 의료 당국 하에 관리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한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구글 자료에 따르면 매달 2백만 명이 ‘위민온웹’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22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사이트에 가장 많은 사용자가 접속한 나라는 브라질이다. 이어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폴란드, 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도 많은 이들이 ‘위민온웹’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 많지 않은 데다 임신중지 이전의 상담 의무 규정으로 인해 낙인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이 찾고 있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독일 상담 기관 프로 파밀리아(Pro Familia)의 관계자는 “‘위민온웹’은 독일 의료 시스템에 기록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독일에 거주하는 사이트 사용자는 ‘위민온웹’을 통해 이웃 네덜란드의 의료 종사자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 현재 독일에서 임신중지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다만 임신중지를 원하는 임신 12주 이내 여성이 국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아 임신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여성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허용된다. 지난해 형법 219a조의 일부 개정으로 여성들은 어느 의료 기관에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수술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관련 당국과 상담 센터, 그리고 독일 의학 협회와 상담해야 한다.
-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목소리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임신중지 지원 네트워크(Britain’s Abortion Support Network)는 몰타와 폴란드와 같이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국가에 거주하는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국가로 여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됐다. 네트워크 활동가들은 독일 언론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위기로 인한 여러 제한조치로 인해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이 더욱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국경이 폐쇄된 이후 몰타로부터 두 배 많은 전화를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많은 여성들이 약물이 더 이상 우편으로 도착하지 않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은 여성이 임신중지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법안을 갖고 있지만, 임신중지 허용 기간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다. 몰타는 폴란드처럼 유럽연합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죄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다.

- 북아일랜드의 경우, 지난해 제한적으로 임신중지를 합법화했지만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거의 없는 데다 의료인에게 ‘시술 거부권’을 부여해 여성들이 안전한 임신중지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태다. 이에 로빈 스완 북아일랜드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북아일랜드 여성이 영국에서 안전하게 무료로 임신중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긴급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과 북아일랜드 정부는 북아일랜드의 임신중지 의료 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때까지 영국에서 무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결정했지만, 코로나 위기로 인한 여행 제한 조치로 어려운 상황이다.
- 한편 폴란드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엄격한 임신중지 법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이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어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폴란드 거리 곳곳에는 ‘정부는 여성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싸울 것’이라고 적힌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 정치인들의 비판 목소리도 높다. 바바라 노바카 의원은 “의회는 광신도들이 내놓은 임신중지 사안이 아니라 기업 파산 등으로 인해 일자리와 집을 잃고 있는 폴란드 국민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폴란드에서는 매년 약 15만 건의 불법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폴란드인이 낙태 금지법 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

BR24(2020.10.1), “Das ewige Dilemma: 25 Jahre Neuregelung des §218”, <https://www.br.de/nachrichten/deutschland-welt/streit-um-abtreibung-25-jahre-neuregelung-des-paragrafen-218,SC4L57r> (접속일: 2020.10.15.)

DW(2020.4.16.), “Poles protest stricter abortion laws amid coronavirus lockdown”, <https://www.dw.com/en/peles-protest-stricter-abortion-laws-amid-coronavirus-lockdown/a-53142475> (접속일: 2020.10.15.)

DW(2020.7.8.), “Coronavirus pandemic reduces access to safe abortions”, <https://www.dw.com/en/coronavirus-pandemic-reduces-access-to-safe-abortions/a-54099750> (접속일: 2020.10.14.)

BBC(2019.3.31.), “Abortion: New laws come into force in Northern Ireland”, <https://www.bbc.com/news/uk-northern-ireland-politics-52068193> (접속일: 2020.10.15.)

유럽연합, 회원국 내 만연한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회원국의 정책 대응 촉구

- 2020년 11월 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남녀 임금격차 문제에 대한 최근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럽연합 27개국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 평균 수치는 2020년 14.1%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14.5%에서 아주 근소한 수

준에서 개선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유럽연합에서는 임금격차 문제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자 매년 유럽 동일임금의 날(European Equal Pay Day)을 기념하고 있다. 2020년은 11월 10일로, 남녀 임금격차 비율 14.1%를 달력상 날짜로 환산하면 이날부터 유럽연합 회원국 내 여성들은 올해 마지막일 까지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셈이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측의 설명에 따르면, 남녀 임금격차 문제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여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이 대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는 점, 기업에서는 유리천장을 맞닥뜨리게 되는 점,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저임금 직종에 종사한다는 점, 많은 여성들이 가족 돌봄과 육아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는 점 등이다.
- 회원국 중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적은 국가들은 룩셈부르크(1.4%), 루마니아(2.2%), 이탈리아(3.9%)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격차 비율이 가장 큰 국가는 에스토니아(21.8%), 오스트리아(20.4%), 독일(20.1%)로 나타났다.
- 유럽노동조합연합(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에서 지난달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임금격차 개선 속도 그리고 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유럽연합의 남녀 임금격차 문제는 2104년 정도가 돼야 해결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남녀 임금격차 비율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의 경우 2121년이 되어야 임금이 동일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 심지어 프랑스의 경우 그동안 성별 임금격차가 개선된 정도가 매우 느렸으며, 그 수치가 2010년 이후 약 0.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유럽노동조합연합(ETUC)은 이런 속도라면 프랑스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으려면 무려 천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유럽연합이 회원국 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이 동일 직급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현상은 용납될 수 없으며 약 64%가량이 회사에서 직종 및 성별 평균 임금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약 26% 정도의 응답자만이 본인의 국가에서 남녀 동일 직급 동일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⁵⁾
- 올해 동일 임금의 날을 기념하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측은 “그동안 유럽연합은 남녀 임금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아직 개선 속도가 느리고, 임금에서의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 철폐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성이 일하든, 여성이 일하든, 그 일의 가치는 동등하다”고 밝혔다.
- 이번 발표 이후, 유럽연합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할 만하다. 또한 회원국별로 남녀 임금격차 비율과 개선 속도가 상이한 만큼, 회원국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설문조사는 2017년 11월 발표된 Special Eurobarometer 465-Gender Equality 2017: Gender Pay Gap을 지칭하며, 해당 설문조사는 유럽 연합 28개 회원국 (당시 영국 포함) 총 28,093명을 대상으로 함.

• 참고문헌 •

Euronews(2020.10.06.), "EU gender pay gap won't be closed until 2104, new report says", <https://www.euronews.com/2020/10/06/eu-gender-pay-gap-won-t-be-closed-until-2104-new-report-says> (접속일: 2020.11.22.)

EU Observer(2020.11.11.), "Investors target French companies over lack of women in top jobs", <https://euobserver.com/social/149644> (접속일: 2020.11.22.)

European Commission (2020.11.06.), "Equal Pay Day: Statement by Vice-President Jourová and Commissioners Schmit and Dalli",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0_2010 (접속일: 2020.11.22.)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2020.10.05.), "EU gender pay gap won't end until 2104 without action", <https://www.etuc.org/en/pressrelease/eu-gender-pay-gap-wont-end-until-2104-without-action> (접속일: 2020.11.22.)

The Local(2020.11.04.), "Why women in France are now working for 'free'", <https://www.thelocal.fr/20201104/why-women-in-france-are-now-working-for-free> (접속일: 2020.11.22.)

스위스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로 2021년 2주의 유급 부성휴가 도입 예정⁶⁾

- 스위스는 중대한 법률 및 제도적 결정이 필요할 때 국민들이 직접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투표(referendum)를 실시하는데, 2020년 9월 27일에 부성휴가(paternity leave)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실시한 국민투표 결과에 따르면, 60%가 넘는 투표자들이 부성휴가 도입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스위스는 2005년에 14주 유급 모성휴가(maternity leave)를 처음 도입했다. 남성의 경우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자녀 출산으로 남성이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자체 재량으로 허용해 줬지만, 부성휴가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는 부재했다. 자녀를 출산했을 때 남성은 이사하는 날 하루 연차를 내듯 하루나 이틀 정도 연차를 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 스위스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부성휴가 도입을 위한 제도적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성공하지 못하고 안건으로 남아있었다. 스위스 의회에서는 작년 9월, 부성휴가 2주 도입 추진안이 승인되었지만, 보수정당인 스위스국민당(SVP, Swiss People's Party)를 비롯해 반대하는 정당들이 부성휴가 도입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서 이번 국민투표에서 결정하게 된 것이다.
- 알랭 베르세(Alain Berset) 내무부(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 장관은 이번 투표 결과는 부모 및 자녀들에게 긍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이번 투표로 부성휴가를 실시하게 되면 스위스 정부는 연간 약 230만 스위스 프랑(한화 약 28억 9천만 원)의 예산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성휴가 실시에 필요한 예산은 연방정부에서 운영하고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같은 비율로 분담하여 적립하는 사회보장 연금 체계의 일부인 소득보장제도에서 지출하게 된다. 유급 부성휴가를 사용하는 남성은 임금의 최대 80%, 2주 휴가 기간 총 최대 2,744 스위스 프랑(한화 약 34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 작성 : 광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이번 투표 결과로 부성휴가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성휴가 제도가 도입되면 남성들은 주말 포함 총 1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4일을 한꺼번에 사용하지 않고 자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최소 5개월 스위스에서 근로, 최소 9개월 스위스 연금 낸 남성이며, 부성휴가 제도가 공식적으로 실시되는 시점부터 출산하는 자녀의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 스위스에서 가족 친화적 정책 발전을 목표로 약 40여 개 이상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Pro Familia Schweiz 대표는 이번 투표 결과가 남성은 밖에 나가 일하고 여성은 집에서 가사 및 육아에 전념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중시하던 스위스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약 17만 명의 노동조합원을 둔 스위스 노동조합 연합 Travail Suisse 측에서도 이번 투표가 스위스의 가족 정책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면서, 남성 노동자들이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 참고문헌 ·

- Swiss Info(2020.09.27.), "Swiss voters approve paternity leave, bury family tax breaks", <https://www.swissinfo.ch/eng/business/family-friendly-proposals-set-for-mixed-results-at-ballot-box/46052078> (접속일: 2020.10.08.)
- The Local(2020.08.11.),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Switzerland's paternity leave referendum", <https://www.thelocal.ch/20200811/everything-you-need-to-know-about-switzerlands-paternity-leave-referendum> (접속일: 2020.10.08.)
- The Local(2020.09.29.), "How will paternity leave look in Switzerland - and who can claim it?", <https://www.thelocal.ch/20200929/how-will-paternity-leave-look-in-switzerland-and-who-can-claim-it> (접속일: 2020.10.08.)

폴란드, 낙태금지법 강화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 계속⁷⁾

- 폴란드에서는 2주 넘게 수도 바르샤바 및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바로 최근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낙태 금지를 강화하는 판결 때문이다. 일별 참가 인원은 상이하나 수천 명에서, 많게는 약 10만 명이 넘기도 한 것으로 추산된다.
- 2020년 10월 22일,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건강 문제로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생명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기형 태아 낙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발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폭력, 근친상간, 또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993년 제정된 낙태금지법에서는 태아에게 심각한 장애가 발견되었을 경우, 성폭력, 근친상간, 또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기존 낙태금지법 보다 낙태시술 허용 범위를 대폭 좁힌 것이다. 단적인 예로, 이번 판결을 적용하면 작년 폴란드에서 합법적으로 실시된 낙태 시술 1,110여 건 중 98%는 불법에 해당된다. 폴란드에서 낙태가 행해지는 대부분의 사유는 임신부나 태아에게서 발견된

7) 작성: 광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신체적 결합 또는 위협이다.

- 폴란드는 가톨릭 교회의 영향이 사회 전반에 널리 미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가진 국가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여당이자 보수정당인 Prawo i Sprawiedliwość(PIS, Law and Justice)에서 헌법재판소에 낙태금지법에 대한 위헌 심사를 청구하여 시작된 것으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다수가 여당에서 지명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낙태금지법도 이미 규제가 강력해서 폴란드 여성단체들에 따르면 매년 8~12만여 명의 폴란드 여성들이 암암리에, 또는 해외로 나가서 낙태 시술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종교와 관계없이 여성은 낙태를 택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수많은 여성이 도로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으며, 젊은 세대 남성들의 지지와 연대도 점차 확산되면서 남성 참가자들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현재 폴란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금지 차원에서 다수가 모여 집회를 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시위 규모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2주 넘게 이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성당으로 진입하거나 점거하기도 했으며, 정부와 성당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또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게 돌을 던지고 제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경찰들을 밀치면서 경찰에서 무력으로 진압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 낙태 규제를 찬성하는 극우단체에서 시위 참가자들을 공격하면서 시민들 간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 현재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주체인 폴란드 현지 여성단체 Ogólnopolski Strajk Kobiet (All-Polish Women's Strike) 대표는 시위 현장에서 “이번 시위는 비단 낙태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적 사회, 근본주의적 종교 국가, 그리고 여성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국가에게 반대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일각에서는 이번 폴란드 대규모 시위가 낙태 관련 판결에 대한 반대로 점화되었지만 종교계의 정책 및 사회문화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입, 정부가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억압하고 특히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들이 함께 표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
-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폴란드 정부에서는 2020년 11월 3일,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법적 발효되도록 거치는 절차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 참고문헌 •

- BBC(2020.10.23.), “Poland abortion: Top court bans almost all terminations”,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4642108> (접속일: 2020.11.8.)
- The Guardian(2020.11.03.), “Poland delays abortion ban as nationwide protests continu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nov/03/poland-stalls-abortion-ban-amid-nationwide-protests> (접속일: 2020.11.8.)
- The Guardian(2020.11.06.), “‘A backlash against a patriarchal culture’: How Polish protests go beyond abortion right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nov/06/a-backlash-against-a-patriarchal-culture-how-polish-protests-go-beyond-abortion-rights> (접속일: 2020.11.8.)



국내*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성희롱 등 예방교육 질 제고에 주력, 교육 참여율은 89.6%로 매년 증가

- 여성가족부는 「2019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예방교육을 실시(99.8%)했으며, 종사자 참여율(89.6%)도 전년에 비해 상승(1.0%p)하였다고 국무회의에 보고
 - 고위직 90.5%(18년 88.1%), 종사자 89.6%(18년 88.6%), 참여율 매년 증가 추세
 - 고충상담창구의 사이버신고센터 추가 설치한 기관 90.0%(전년 대비 52.2%p 증가)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9.21.]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229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여성 고위직 확대 위해 '일·생활 균형' 정책 필요

- 여성가족부는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의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조항*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여성 임원 확대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남녀 팀장 각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여성 팀장은 남성 팀장보다 미혼 비율이 높고, 유자녀 비율이 낮으며, 경력 공백 비율 높음
 - 여성 팀장 72%, 남성 팀장 38%가 유리천장 존재한다고 응답
 - 여성 임원 등 고위직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남녀 팀장 모두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을 1순위로 꼽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9.2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24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내동향' 중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주요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강화

-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유형을 구체화함(제8조)
 - 성폭력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함(제36조)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9.2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7242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중위30%이하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24세 이하 → 한부모 34세 이하 한부모) 등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9.2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724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전면 개편

- 여성가족부는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부터 기존 민간 중심에서 ‘정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것을 밝힘.
 -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 모니터링 및 개인별 사례 관리 실시
 - 올해 사업의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우려가 없도록 보조사업자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 예정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9.25.]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7246

결혼이민예정자를 위한 현지사전교육 3개국으로 확대

- 여성가족부는 태국의 결혼이민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현지사전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힘.
 - 결혼이민사증 발급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와 복지제도, 여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정보제공 프로그램 중심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9.27.]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244

조두순 출소 대비,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은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금년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 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방안,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 마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0.3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297

사실혼 관계의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 권고

- 여성가족부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인터넷 상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피해자보호원칙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7.14.]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24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민간 전문가 긴급 회의 개최

- 여성가족부는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① 외국인 건강관리 지원 정책, ② 영유아 보육사업, ③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④ 소방공무원 채용관련 제도 개선 등 4개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0.30.]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299

-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2020년 9월 여성고용동향을 발표함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ILO기준)은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남성 0.7%p 하락)함
 - 여성고용률(OECD 15~64세 기준)은 전년동월대비 1.8%p 하락(남성 1.0%p 하락)함.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30대 여성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3.1%p, 20대는 2.4%p 하락하였음 [여성가족부 정책자료실, 2020.11.02.]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bbtSn=704872 여성가족부, 2020년 9월 여성고용동향 발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논의

- 여성가족부는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가성평등지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
 - 성별분리현상, 주관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새롭게 구성된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 제시
 - * 셋째아 이상 출생 성비, 직업교육훈련 경험률 등 시의성과 관련성이 낮은 지표는 삭제하고 노동시장 직종 분리, 경력단절여성 비율 등 신규 지표 추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1.0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308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 역대 최고치 달성

- 여성가족부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특히 기초 자치단체 위원회에서 위촉직 여성참여율의 평균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고 밝힘.
 - 개별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 40% 이상 달성 비율 : 광역 84.6%, 기초 64.8%
 - 기초 지자체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 평균, 처음으로 40% 넘어서
 -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의 평균 : 광역('17)42.2% → ('19)44.9%, 기초('17)35.6% → ('19)40.8%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07.28.]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147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 절차 마련

-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 도입, 2차 피해 보호조치 의무화 및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 계획을 마련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함.
 - 주요내용
 - 성희롱 등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 도입 추진
 - 지자체 평가 항목에 '성평등 조직문화지표' 신설, 조직진단 및 조직문화 개선 지원
 -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 마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1.0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309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실시

- 여성가족부는 11월 25일(수)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함.
 - 2020년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여 실시함. 2021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임.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1.0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311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 발표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함.
 -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추진, 영아 유기 예방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 ‘임신·출산 갈등상담(1644-6621)’ 카카오톡 상담 및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 개설 등 정보제공 강화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추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기간 확대
 -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겪는 차별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 및 차별 시정 추진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1.1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326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법적 보호 강화

- 여성가족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1월 20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21년 17개소)
 -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및 검사의 교육·상담 과정 명령 규정 삭제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알선 범죄’ 신고포상금(100만 원) 등 규정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1.19.]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342

여성·평화·안보를 위한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 공청회 개최

- 여성가족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에 따른 우리나라 제3기 국가행동계획

(2021~2023) 수립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

-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1990년대 코소보·르완다 등 분쟁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을 계기로,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임.
- 제3기 국가행동계획(안)은 5개 분야, 11개 목표, 23개 세부과제, 54개 행동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과제 중 중복되는 과제는 통합하되, 여성·평화·안보 분야의 지역적 확산, 치안 영역 포괄, 거버넌스 확대 등 새로운 정책 환경을 반영한 신규·확대 과제를 포함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1.26.]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7361

여성의 연령대별 일자리 실태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하는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분석한 고령층·청년층 여성고용동향을 공유하고 여성의 연령대별 노동시장 특성 분석 및 관련 정책방향을 논의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여성 고령층 중 55~64세 비중이 10년 전에 비해 증가함과 동시에 55~64세 여성 고령층 중 대졸 이상 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인구구조와 학력수준의 변화가 확인되었음.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11.27.]

• 참고문헌 •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n=707370

[보건복지부]

초등생 형제 화재사건 관련, 돌봄 공백 최소화, 아동보호 강화 추진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임 등 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고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집중모니터링) 취약계층 사례관리 아동 약 7만 명 전체 대상 학대발생 여부 집중점검
- (돌봄서비스)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대상으로 요보호아동 보호 강화에 관한 협조 요청
- (학대대응) 아동학대 발생 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법원과의 협의 추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9.18.]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59947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두어 학대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2020.4.7. 공포/2020.10.1. 시행 예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2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 수행해야 할 업무범위 설정 (안 제23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아동의 가족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상담·치료 등의 사례관리를 지자체가 감독 등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9.22.]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5999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3.31. 공포, '20.10.1. 시행)되어, 급여 비용 거짓청구 등 위반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 의무화 등이 추가됨에 따라, 세부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 및 결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 추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단을 공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 등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9.22.]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59992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양육 부담 감소

-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힘.
 - (미취학·초등학생 학령기) 돌봄 지원을 위해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
 - (중학생 학령기)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해 아동 1인당 15만원 지급 등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9.24.]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60030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 늘리고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안심정책 마련

- 보건복지부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매환자와 가족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관리·돌봄) 장기요양 5등급자(치매)도 치매안심센터의 쉼터(단기보호) 이용 가능
- (가족지원)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 연 6일 → 12일로 단계적 확대 등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9.25.]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069

아이들을 위한 공공 보호체계 본격 실행

- 보건복지부, 법무부는 2020년 10월부터 민간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힘.
 - 이는 지난 19년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제시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여 추진하는 것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09.28.]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089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10월 7일(수)부터 10월 20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이번 개정안은 낙태를 전면금지하고 있는 형법 자기 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는 헌법불합치(2019.4.11.)이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연유산 유도약물 도입 근거 마련
 - 위기 갈등 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원
 - 세부적 시술 절차 마련
 -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 배제 조항 삭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10.07.]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60203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 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목)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힘.
 - 이번 제도개선으로 출생신고 전이라도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한 법원

확인 절차 진행 증임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 제출 시, △실제 양육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10.18.]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4&CONT_SEQ=360338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여성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환경과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 등 사회·제도적 지원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임.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 지원
 - ②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지원
 - ③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 ④ 세부적 시술 절차 마련
 - 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및 형법 적용 배제 조항 삭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11.17.]

• 참고문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6&CONT_SEQ=361054

[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 구제절차 도입 등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임신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함.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 임신 중의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허용하여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유·사산을 예방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시

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

-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 조건, 미혼 등 조건 제시 금지 : ‘여성 근로자’에 대해 모집·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던 것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10.20.]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1534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② 생활안정자금 용자 사업 등의 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및 ③ 무급으로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힘.

• 주요내용

- 현행 1회인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로 확대
- 「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용자 사업 등의 대상 확대
- 산재보험적용 특례대상에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무급종사 친족 추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11.20.]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1642

2020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는 2020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분석 결과를 발표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총 2,486개사(공공 340개사, 지방공사·공단 151개사, 민간 1,995개사)의 2020년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69%, 관리자 비율은 20.92%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 대비 각각 6.92%p, 10.7%p 증가함.
- 2016년 제도 시행 이래로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체 대상 사업장의 여성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가 여성고용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11.25.]

• 참고문헌 •

http://www.moel.go.kr/news/eneews/report/eneewsView.do?news_seq=1166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저출생 시대, 여성의 노동과 출산을 이야기한다!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성평등 노동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초저출생 시대, 2030 여성의 삶 : 노동과 출산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포럼을 개최함.
 - 특히, 2030 여성들의 변화된 인식과 삶의 여건들이 ‘노동 중심 생애’를 지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청년 여성들의 노동 여건과 출산 선택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0.10.27.]

• 참고문헌 •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14>

[통계청]

2020년 고령자의 시간활용 및 의식에 대한 분석결과 발표

- 통계청은 노인의 날을 맞아 「2019년 생활시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의 시간활용 및 의식’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 2018년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20.8년(남자 18.7년, 여자 22.8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남자는 0.5년, 여자는 1.5년 더 높은 수준
 -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약 3명은 자신의 여가시간과 가사분담 시간에 만족
 -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 중 68.2명은 학대피해 경험이 있으며, 여자의 피해 경험률이 90.6명으로 남자(38.5명)보다 2.4배 이상 높음
- [통계청 보도자료, 2020.09.28.]

• 참고문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532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0년 사회조사 결과 발표

- 통계청은 가족관계 만족도, 가사 분담 등 우리사회 인식과 현실을 담은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함.

